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손익

박 재 적 (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2-26

정부는 6월 29일로 예정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서명을 국민 정서를 고려해 보류하였다.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국내 여론의 내면에는 한국 국민의 저변에 광범위하게 내재되어 있는 반 일본 정서가 녹아있다. 당분간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다시 시도하기는 용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었고 곧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일 군사교류의 확대 여부는 차기 정부의 판단에 맡겨질 공산이 크다. 늦기는 하였지만 이제부터라도 반일 감정에서 한 발짝 벗어나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손익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한 이유는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국이 더욱더 북한에 대해 효율적인 방어 태세를 취할 수 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산해내고 있거나 미국이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대북 정보에 더해 일본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으로서의 소량의 정보라도 귀중하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모든 대북 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일본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즉,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대북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창출해내는 이익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손익계산은 동 협정 체결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우려는 중국의 부정적 반응이다. 중국은 협정 체결을 자국을 봉쇄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 구축의 서막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중국의 인식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심화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의 서막으로 간주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국익에 손해일까?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태 지역 안보 질서의 측면에서 미·중 역학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둘러싼 논란의 이면에는 아·태 지역에서 개별 동맹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미국 주도 동맹의 연계를 비난하는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 호주, 일본, 필리핀, 한국, 태국과의 동맹에 기반을 둔 이른바 ‘중심축과 바깥살’ 동맹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동 동맹 체제를 운영함에 있어 미국은 냉전기와는 달리 개별 동맹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탈 냉전기 안보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비전통안보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깥살’ 동맹국 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역내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이질화로 아·태 지역에서 효율적인 다자안보기구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개별 동맹의 소 다자적 연계가 효율적인 다자안보기구를 창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주도 동맹이 ‘소 다자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미국·호주 동맹과 미국·일본 동맹에 기반을 둔 미·일·호 삼국 간의 안보협력이다. 2001년 ‘삼자 안보대화’로 시작된 삼국간의 안보협력은 2006년 이래 고위급 간 ‘삼자 전략대화’로 격상되었다. 더군다나 삼국은 정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미국·호주 동맹과 미국·일본 동맹의 연계로 인해 호주와 일본과의 안보협력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과 2008년에 체결된 ‘안보협력 공동 선언’과 ‘안보 양해 각서(defense memorandum)’는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이정표다.

미국이 탈 냉전기 ‘중심축과 바깥살’ 동맹 체제를 운영함에 있어 개별 동맹의 연계를 추진하는 경향은 미국이 동맹국과의 군사 훈련에 다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미국과 인도의 ‘말라바(Malabar)’ 해상 군사훈련에 2007년부터 호주와 일본이 비정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태국과의 ‘코브라 골드(Cobra Gold)’ 군사훈련 및 미국과 필리핀 간의 ‘발리카탄(Balikatan)’ 군사훈련도 다자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2010년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충돌 후 실시된 미·일 군사훈련에 한국이 참관국으로 참여한 것과 2012년 1월~2월에 실시된 미·일 군사훈련에 주한미군 150명이 처음으로 참가한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 동맹의 연계를 자국에 대한 봉쇄로 인식한다. 특히 중국은 앞서 언급한 미국·일본·호주 삼자 간 안보협력의 강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궁극적으로 삼자 안보협력의 틀에 인도를 편입시켜 중국에 대항한 소규모의 아태지역 판 나토(NATO)를 결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필리핀, 미국·태국 및 미국·호주 동맹 관계의 강화를 미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공세적 재귀환'으로 규정하고, 이를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편중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일본 및 동남아 국가와 영토 분쟁을 촉발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 주도 동맹의 강화는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하여 역내 안보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다.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이 미·중 대치의 원인제공자로 서로 상대국을 비난하는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가 구현되고 있다.

한·일 군사교류 확대에 미국과 중국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도 미·중 대결구도의 관점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연계되고 나아가 일본과 한국의 가상 동맹 관계가 형성되기 위한 첫걸음이다.¹⁾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중국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봉쇄 전선 구축과정이다.

그런데 한·일간 군사교류 확대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한·일간 군사교류 확대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북한 편향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미국에게 한·미관계가 미·중관계의 하부구조인 것처럼, 중국에게도 북·중관계는 미·중관계의 하부구조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계시키고 한·일 가상 동맹을 구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동조한다면, 중국은 상부구조인 미·중관계에 있어 불리한 안보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한국은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편향적 태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동맹 연계 정책에 협조할 수밖에 없음을 중국에 주지시킴으로써, 중국이 북한 도발에 대한 편향적 태도를 수정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낮은 수준의 군사교류를 실시하는 것은 대 중국 레버리지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한국이 반 일본 정서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고려에서 필요하다면 일본과의 군사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 협정체결 후에도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북한 편향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한국은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등 한·일 군사교류의 단계를 점차 높여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군사교류의 강도가 합동 군사훈련 수준까지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국 간 군사훈련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고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냉전 대결 구도가 고착되면 될수록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데 있어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1) 커트 캠벨(Kurt Campbell) 차관보는 2011년 3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체도를 추진할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 안보 구도가 더욱 통합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더욱 어려워진다. 한·일 군사교류의 확대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신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